

2012년 중국 양회(兩會) 결과

2012. 3.

□ 목차 □

I. 2012년 양회 주요 이슈 -----	1
II. 향후 국정운영 방향 및 평가 -----	7
III.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	9



I 2012년 양회 주요 이슈

※ 양회의 의미

- ▶ “전국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를 말함. 중국 내 최대 정치행사로, 매 5년 단위로 '1회' 개최되며, 각 회는 '5차'의 회의로 구성됨
 - * 2012년 양회(3.3~3.14)는 제11회 5차 회의이며, 2013년 양회는 제12회 1차 회의임
- ▶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 의사결정 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구임. 정부업무 보고, 법률 제정, 예산 심의, 국가주석 선출 등의 기능을 수행
- ▶ 정협은 국가정책 자문기구로서 국정방침 논의, 전인대에 제출할 결의안 심의 등 기능 수행

《중국 2012년 주요 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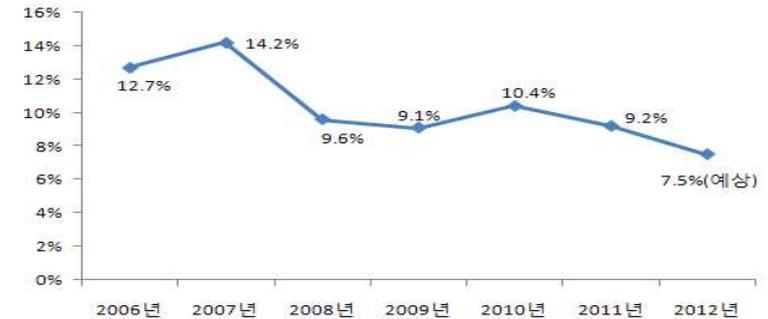
- 국내총생산(GDP) 7.5% 증대
- 소비자 물가지수(CPI) 4% 유지
- 수출입 물량 약 10% 증대
- 도시 신규 일자리 900만개 이상 창출, 도시 실업률 4.6%로 억제

《2012년 중국의 주요 재정 지출/수입 구성》

주요 재정수입 (%)	주요 재정지출 (%)
수입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비세 (26.5%)	지방재정 지원 ¹⁾ (23.7%)
기업소득세 (19.9%)	국방 (10.1%)
국내 부가가치세 (18.5%)	사회보장 및 고용창출 (9.0%)
국내 소비세 (13.7%)	농촌사업 (8.6%)
개인 소득세 (6.1%)	교육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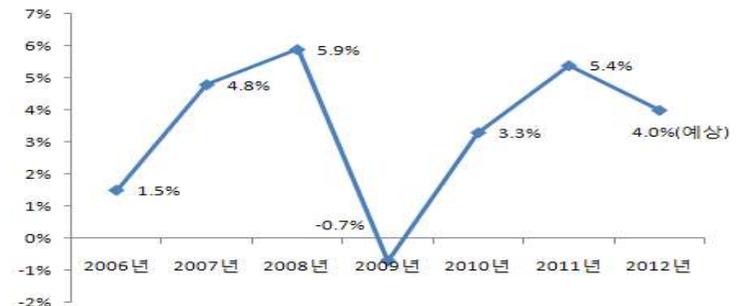
- GDP 성장 목표치를 8년 만에 처음으로 8% 미만인 7.5%로 조정
 - GDP 성장치 하향 조정은 중국이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통해 경제발전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임을 의미
 - 더 이상 표면적인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지 않고, 불안정한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비하여 질적으로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을 표명

《2006년 이후 GDP성장률》



-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4%정도로 조정할 예정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CPI 상승폭이 지난해 8월부터 연속 5개월 하락했으나, 연간 상승폭은 5.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음

《2006년 이후 CPI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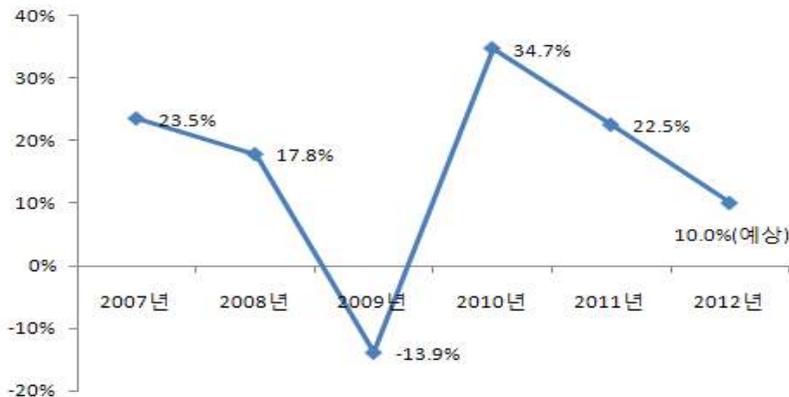


1) 지방재정 지원 (對地方一般性转移支付) :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나 기업이 상품이나 용역 등을 무상으로 개인이나 하급정부에 지원해주는 것을 말함. 일종의 소득 재분배 개념

□ 2012년 중국 수출입 물량 약 10% 증가 예상

- 유럽 경제위기의 지속적인 악화와 원가 상승의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이래 국제 무역의 하락세가 분명함. 올해 1월 평균 수출입 증가세도 둔화 조짐을 보였고,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0.5% 하락
- 유럽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요 감소로 수출입 기업의 경영난이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수출관세 환급, 환율 등 안정적인 대외무역정책 수립에 힘쓸 것임. 또한 재정·세무 연구의 강화, 수출신용리스크보장체제 구축, 무역마찰 발생 시 효율적 대응방안 수립,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등도 추진 예정
- 장중산(长钟山) 상무부 부부장은 적극적인 개발도상국 시장개척으로 유럽, 미국에서 비롯된 수출에 대한 타격을 단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무역대국에서 무역 강국으로 전환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함

《2007년 이후 수출입 물량 증가율》



□ 올해 인민폐 환율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나, 환율 상승폭은 작년보다 낮을 것

- 3월 10일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적자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
- 1월과 2월에 나타난 무역적자는 인민폐 환율이 이미 균형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균형과 내수확대, 구조 조정 방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인 것을 의미함
- 또한 중국은 시장흐름에 따르는 환율정책을 추진하여, 국제수지 평형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힘

□ 2012년 정부의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약 14.1% 증가할 것이며, 재정적자는 약 500억 위안 감소한 8000억 위안으로 예상됨

- * 이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는 각 5500억 위안, 2300억 위안임
-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며, 적정 수준의 재정적자와 국제규모를 유지할 것임

□ 2012년 통화정책은 신중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추진할 예정

- 광의의 통화(M2) 증가율 목표치 14%로 예상
- * M2 : 통화지표중 하나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예금의 합계인 협의통화(M1)에 시장형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등을 포함하는 개념
- 지난 2월 24일부터 실시된 인민은행의 인민폐 지급준비율 0.5% 하향조정으로, 약 4000억 위안이 시장에 풀리게 되므로 여러 방면에서 국민경제의 성장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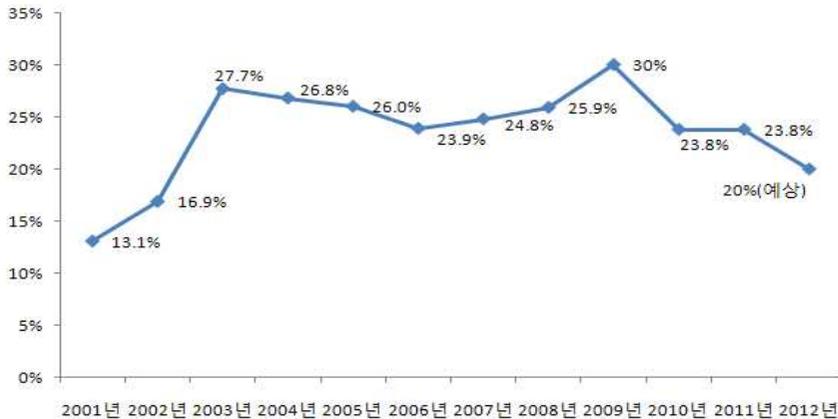
□ 사회보장과 일자리 창출에 5,750.7억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비 21.9% 증가한 수치임

- 신흥농촌과 도시 주민의 연금보험제도 전면적 실시, 도농민 최소생활보조금 및 기업 퇴직자 기초연금수준 향상, 취업보조정책의 역량 강화 등을 추진 예정
- 도시 신규 일자리 900만개 이상 창출, 도시 실업률 4.6% 정도로 역제가 목표임

- 2012년 중앙 재정 중 1조2,287억 위안을 “삼농(농촌, 농업, 농민)” 문제 해결에 투입
 - 작년 “삼농”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1조 위안 이상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에는 이보다 1,868억 위안이 많은 1조2,287억 위안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 앞으로도 농업기술발전과 농민교육, 농산품 안전보장 등 “삼농”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

- 2012년 부동산 가격 조정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
 - 2011년부터 부동산 관련 대출 억제, 금리 조절 등을 통해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억제해 왔음. 2012년에도 GDP 성장률의 조정을 통해 시장 자금과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동시에 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전년도 1000만 채의 보장성주택 신규 착공에 이어, 2012년에는 700만 채 이상의 착공을 목표로 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 추진

《2001년 이후 전국 사회고정자산투자 성장률》



* 출처 : 국가통계국

- 전국 교육 경비 지출은 2조1,984억 위안임. 이는 2012년 GDP의 4%를 차지하는 수치임
 - 이 중 중앙 재정 교육 지출은 3,781.3억 위안으로 전년비 16.4% 증가
 - 특히 중서부지역과 동부빈곤지역을 중심으로 150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비 48.1% 증가한 수치임. 또한 농촌의무교육 보장제도와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에 1,057.54억 위안 투입 예정

- 2012년 북경, 천진, 상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주요 지역, 직할시 및 성도는 PM 2.5 항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모든 도시로 확대될 계획임. 또한 신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발전에 노력할 것을 표명
 - * PM 2.5 : 대기 중 2.5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 2.5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는 폐로 들어갈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고,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
 - 정부 업무 보고에서 PM2.5와 같은 전문용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중국 정부에서 환경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에너지 구조개선, 환경 보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의미

- 올해 국방비로 6,702.7억 위안 지출 예정. 전년비 676억 위안 증가
 - 리짜오썩(李肇星) 전인대 상무·외사위원회 주임위원은 GDP에서의 국방비 비중은 1.28%로,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국방비가 GDP의 2%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낮은 수치라고 밝힘
 - 국가주권의 보호, 안전, 발전과 중국 특색의 군사개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 재정수입의 안정적 성장 하에 국방비를 합리적인 선에서 증대시킬 예정
 -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군사훈련 강화 예정

II 향후 국정운영 방향 및 평가

1 금번 양회의 특징

- 이번 양회는 현 4세대 최고지도부 체제에서 5세대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개최되어, 향후 새로운 지도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었음

2 신 지도부 국정운영 방향

- 중국 정부는 빠른 성장보다는 **민생안정, 내수확대, 녹색산업** 등 질적 성장을 선택
 - 8년 만에 처음으로 GDP 성장 목표를 **8% 이하 (7.5%)**로 발표
 - * GDP 목표 하향은 안정적 성장기조 유지를 통한 경제 산업 구조의 개선 (稳中求进)을 위한 것임
 - * 맹목적 성장보다는 균형과 분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내수시장·소비 진작, 서부내륙 지역 발전, 임금인상, 환경보호 정책 등이 가속화될 것임
 - 사회보장, 의료, 취업, 소득분배 등 **민생문제**와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발표됨
 - * 빠른 경제성장으로 대두되었던 여러 사회문제, 민생문제 해결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됨
 - * 향후 정부에서 환경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문제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연구가 예상됨
 - 불안정한 세계경제 속에서 중국 역시 **무역액 증가율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존 시장을 견고히 하고, 신흥시장을 개척할 예정
 - * 중국은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보다 안정적인 대외무역정책을 추진할 예정

3 금번 양회에 대한 국내외 반응

□ 중국내 반응

- 전년도 양회에 비해 “**개방**” 되었음. 인터넷 매체와 블로그 등을 통해 네티즌 의견이 쏟아져 나왔음
 - * 앞으로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양회에서 중국 네티즌이 가장 관심 있게 본 다섯 가지 주제는 **사회적 도덕성 확립, 식품안전 관리, 빈부격차 해소, 부동산 가격 조정, 부패정치 척결** 등임
 - * 중국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정부는 체제 변화 과도기에 민심을 잡기 위한 민생안정 예산 배정 및 정책을 추진할 것임

□ 해외논평

- 홍핑판(洪平凡) 유엔 경제·사회 사무국 세계경제예측센터 주임은 중국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에는 3개 부문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① 경제, 정치와 사회의 개혁, ② 기술의 진보, ③ 시장원칙에 입각한 경제 발전 등이 그것임
- 썩위칭(邢子青) 아시아 개발은행연구소 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환경보호, 교육과 의료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내수 소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고속성장으로 나타난 후유증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
- 서브라마니안(Alwinder Subramanian)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간섭 완화, 지속적 시장화 등을 통한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힘. 경제성장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만성적 가격 왜곡현상 제거, 수출과 투자에의 의존도 감소, 서비스업의 발전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 제시

III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 전반적으로 불리해진 경영환경

-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서 재직 중인 중국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므로, 중국 진출 기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이 전망됨
- 환경 관련 법률 및 제도 강화에 따라 중국내 외국기업의 비용 상승이 예상되며, 외자기업에 대한 CSR 압력도 거세어질 것으로 보임
- 12.5 계획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는 장기적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됨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증대

- 내수확대 정책으로 인한 기회 증대
 - * 필수소비재, 화학업종, 가전제품 분야에서 소비부양책의 수혜를 입을 것임
 - * 이미 중국시장에 적응 완료한 진출기업은 내수확대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것임
- 산업구조 재편으로 인한 기회 창출
 - *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 12.5계획의 7대 신흥전략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
 - * 특히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서비스업은 우리 기업에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음
- 중국 정부의 경제발전 기조가 지속적으로 ‘개방’ 및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한중 FTA 협상이 곧 개시될 전망임
 - * 따라서 기업은 새로운 경협체제 구축으로 조성될 교역환경을 사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